12-11 (통권 제 482호)
2012. 3. 23.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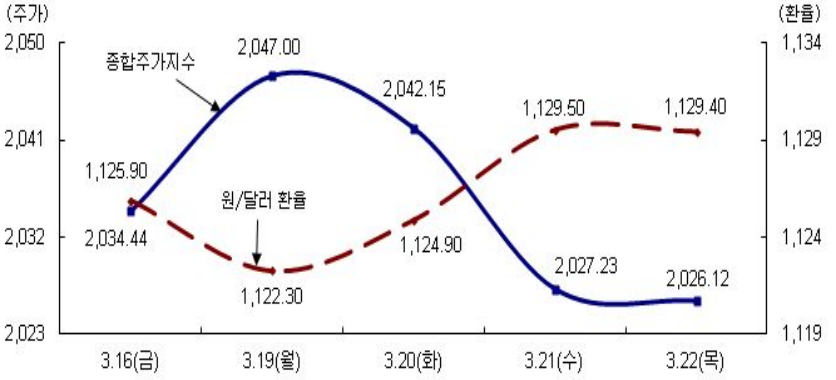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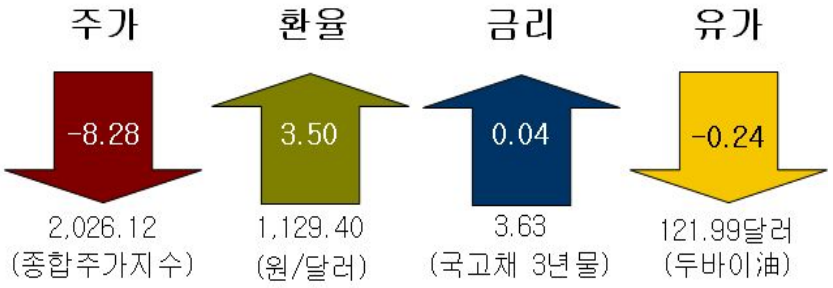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8대 정책 과제
  - 청년벤처기업 10만개 육성 등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3.16~3.22)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8대 정책 과제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대표 집필 : 김 동 열 수석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 공동 집필 : 백흥기 수석연구위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김민정 연구위원, 장우석 연구위원, 장후석 연구위원, 조호정 선임연구원, 최성근 선임연구원

Executive Summary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8대 정책 과제 - 청년벤처기업 10만개 육성 등

■ 청년 일자리 현황 : '취업준비생'과 '쉬었음'(취업대기인력) 크게 증가

청년층 고용시장에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이 2004년 45.1%에서 2011년 40.5%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11년 **청년 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3.4%)의 2배 이상**이다. 게다가, 취업 의사와 능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생'과 '쉬었음'으로 응답한 청년(취업대기인력)이 2004년 4.0만 명에서 2011년 8.2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 청년 고용시장 악화의 원인

최근 취업대기인력이 증가하는 등 청년 고용시장이 악화된 것은 **고학력화, 좋은 일자리 부족, 일자리 미스매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미흡** 등에 기인한다. 2010년 현재 **대학진학률은 79%**에 달하는 등 고학력화와 학력인플레 현상이 심각한 반면,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취업률은 54.5%**에 불과하고, **대기업 정규직의 비중은 2005년 51.4%에서 2011년 45.3%로 감소**하는 등 좋은 일자리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 등으로 대기업 선호 현상이 계속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지속**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는 여전이 심각하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알선하고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이를 위한 지출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8대 정책 과제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등 청년 고용환경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과잉학력 해소**를 위한 **교육시스템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 연계한 현장형 직업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청년 직업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청년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해외인턴사업 등 정부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다. **넷째, 청년 벤처 10만개 육성과 벤처펀드** 확대를 통해 청년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다섯째,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기술 신지식 미래산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여섯째,** 학자금 대출 연체인원이 5년만에 15배 이상 급증하고, 신용유의자도 2010년 2.5만명을 상회함에 따라 **청년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취업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일곱째, 주택, 보육, 근무환경 등 청년 취업 인프라를 개선**하여 만혼과 저출산 추이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직업훈련과 일자리 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등 '일하는 복지'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1. 청년 일자리 현황 : '취업준비생'과 '쉬었음'(취업대기인력) 급증

○ (현황) 청년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하락하고,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며,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취업대기인력[1]이 급증함

- 청년 고용률이 2004년 45.1%에서 2011년 40.5%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2011년 현재 7.6%로 전체 실업률 3.4%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
  - 청년 고용률의 하락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청년 취업자의 연평균 감소율(2.3%)이 청년 인구의 연평균 감소율(0.8%)보다 훨씬 빨랐다는 점을 반영
  - 청년 실업률은 2011년 기준 7.6%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7.2%, 2008년 7.2%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음

<청년 실업자 및 '일하고 싶은' 비경제활동인구 (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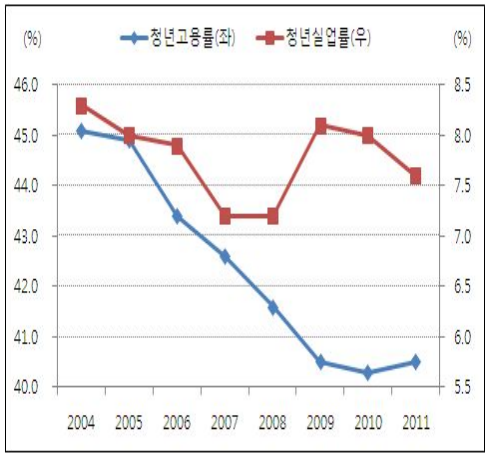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실업자	취업 의사와 능력을 지닌 비경제활동인구*			
	소계	취업준비생	쉬었음	기타**
320	112	45	38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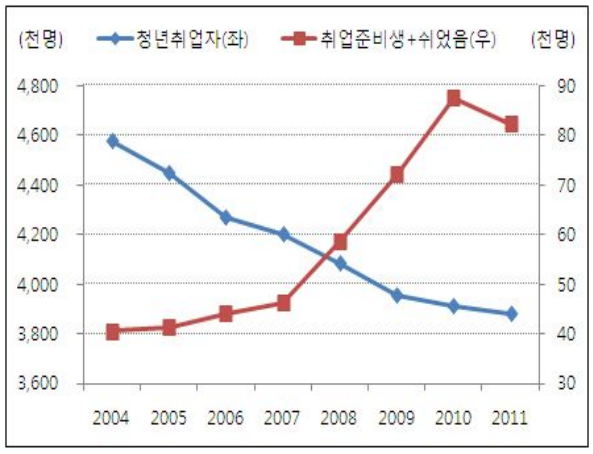
주: 1. 2010년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제시한 '취업애로계층' 가운데 '불완전취업자'를 제외
2.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만 별도로 뽑아냄
3. '기타'는 일할 의사와 능력을 지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를 하지 않은 학생, 심신장애, 육아·가사, 年老 등에 체크한 사람들

-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할 의사와 능력을 지닌 '취업준비생'과 '쉬었음' 응답자(취업대기인력)는 2004년 4.0만 명에서 2011년 8.2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청년 취업자 및 '취업준비생 + 쉬었음' [1]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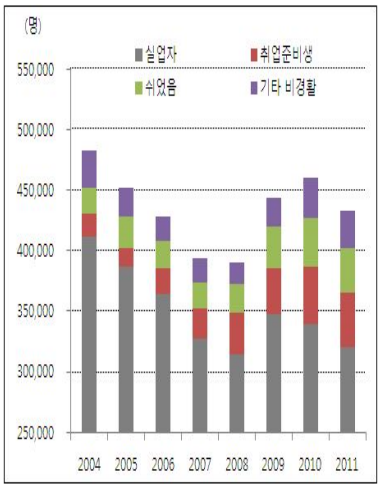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현대경제연구원
주: 일할 의사와 능력을 지닌 '취업준비생'과 '쉬었음' 응답자 = 취업대기인력

1) 본 보고서에서는 **'취업대기인력'**을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 의사와 취업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생'과 '쉬었음'에 응답한 사람들"**로 정의함

<청년 실업자 및 '일하고 싶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2004	2006	2008	2010	2011
실업자		411,741	364,174	314,529	339,743	320,221
취업 의사와 능력을 지닌 비경제 활동 인구	취업 준비생	19,082	21,369	34,598	46,285	44,501
	쉬었음	21,410	22,597	23,778	41,329	37,757
	기타	30,201	20,369	17,322	32,539	30,025



자료: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1. '기타'는 일할 의사와 능력을 지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를 하지 않은 학생, 심신장애, 육아·가사 등에 체크한 청년들. 2. 청년(15세~29세) 기준

○ (문제점) 100만 명이 과잉학력 상태에 있으며, 높은 대학진학에 따른 추가 지출이 GDP 1.1% 수준(약11.3조원)으로 가계의 소비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 학력과 일자리 간 미스매칭으로 청년 취업자 중 100만 명이 과잉학력 상태

· 2010년 기준 15~29세 청년 취업자 중 대학 학력 이상 졸업자는 215만 명에 달하나, 대졸 학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115만 개에 불과해 100만 명 이상이 학력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 고용되어 학력과잉 현상이 심각함

· 한국의 대졸자 고용률은 76.1%로 독일 86.4%, 일본 79.7%, 미국 80.8%에 비해 낮아 교육과 고용의 긍정적 관계[2]도 저조한 편임

- 이외에도 고학력 선호로 인해 OECD 국가 평균(1.5%) 보다 1.1%p 더 많은 약 11조 3천억 원이 추가 지출되고 있음

· 2008년 기준 한국의 대학교육 지출 규모는 GDP대비 2.6%에 달하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5%에 비해 1.1%p 높음. OECD 평균을 초과한 GDP의 1.1%p는 약1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임

· 한국은 대학교육에 있어 공공의 비용부담이 GDP 대비 0.6%로서 OECD 평균인 1.0%에 크게 못 미치는 반면, 민간의 부담비율(1.9%)은 공공 부담비율(0.6%)의 3배에 달해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25~64세 이상의 대학졸업자이며 2009년 기준임, Education at a glance,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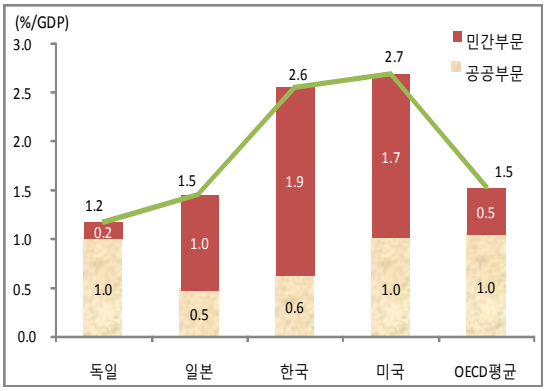
<청년취업자의 학력별 미스매칭[3]>

(단위: 천 명)

	필요학력별 일자리 수 (A)	필요학력별 보유자 수 (B)	평가 (B-A)
ISCED 5-6	1,152	2,154	1,002 (공급초과)
ISCED 3-4	2,447	1,655	-792 (공급부족)
ISCED 0~2	315	105	-210 (공급부족)

자료: 통계청 Meta, 현대경제연구원.
주 1) 15-29세 취업자 기준임.
2) ISCED 0-2는 중졸 이하, 3-4는 고졸 이하, 5-6 대졸 이상.

<GDP대비 부문별 대학교육 지출 비교>



자료: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2008년 기준임.

2. 청년 고용시장 악화의 원인

○ (좋은 일자리 부족) 대졸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졸자의 취업률은 부진하고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

- **고학력화 심각 :** 2010년 현재 대학진학률은 79.0%에 이를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소위 학력 인플레 현상이 심각[4]
  · OECD에 따르면 우리 일반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원의 입학률은 71%로 OECD 평균인 56%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5]

- **대졸자의 취업률 부진 :** 2011년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은 58.6%에 불과하여 대졸자의 취업난이 심각
  · 4년제 대학 취업률은 54.5%이며, 전문대학 취업률은 60.7%로서 전체 대졸자들의 취업률은 졸업생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 일자리의 부족 :** 대졸자들이 주로 원하는 '대기업 정규직' 취업자비율은 2011년 기준으로 취업자의 8.1%에 불과해 인력 적체 현상이 심각
  · 2005년 이후 청년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증가
  · 대기업 취업자 중 '정규직' 비중은 2005년 51.4%에서 2011년 45.3%로 감소

3) 취업자의 교육정도는 직업별 분류표에 의거해 관리자와 전문자 및 관련종사자는 ISCED 5~6단계, 사무·서비스·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휜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ISCED 3~4단계, 단순노무 종사자는 ISCED 0~2단계로 구분하였음.
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5)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2011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와 취업자>

(단위: 명, %)

	졸업자	취업 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고등교육 기관전체	559,000	49,963	292,025	58.6
일반대학	293,967	257,375	140,201	54.5
전문대학	188,216	174,068	105,589	60.7
교육대학	5,574	5,420	2,988	55.1
산업대학	21,339	19,690	12,848	65.3
기능대학	6,329	5,850	4,999	85.5
각종 학교	860	643	240	37.3
일반대학원	42,715	34,917	25,160	72.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청년인구 구성과 대기업 정규직 비중>

(단위: 천 명, %),

	청년 인구	경활 인구	비경활 인구	대기업* 정규직비중
2004	10,141	4,990	5,151	-
2005	9,920	4,836	5,084	51.4
2006	9,843	4,634	5,209	48.2
2007	9,855	4,530	5,325	44.9
2008	9,822	4,398	5,423	48.8
2009	9,780	4,304	5,477	40,6
2010	9,705	4,254	5,452	48.3
2011	9,589	4,199	5,390	45.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micro data
주: 대기업 취업자 중 정규직의 비중

○ (일자리 미스매치) 고비용의 대학교육과 일자리 양극화,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으로 청년 실업이 고착화되고 있음

- **고비용 대학교육 :** 한국 대학교의 연평균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민간지출 비율도 매우 높음
  - 한국의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각각 4,717달러와 8,519달러로 미국(국공립: 5,943달러, 사립: 21,979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6]
  - 고등교육기관의 공교육비 중 민간지출 부담은 OECD 평균치인 30.9%보다 2배 이상 높은 79.3%로 칠레(85.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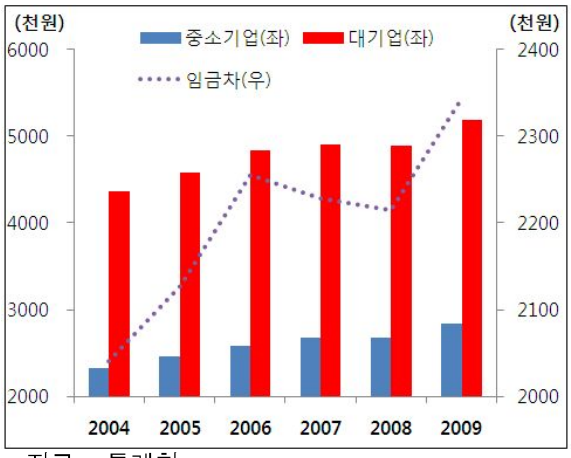
- **일자리의 양극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및 각종 복지혜택 등의 차이로 인한 '일자리의 양극화'로 인해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 현상이 심화
  - 2010년 기준으로 대기업 평균 임금(현금급여와 상여금)은 월 518만원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284만원으로 대기업의 54.7%수준
  - 각종 복지혜택(복지포인트, 체육 및 의료 시설)과 자녀교육비 지원 등 대기업의 급여 혜택이 중소기업에 비해 월등하여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

- **중소기업의 구인난 :**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음
  -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사이의 차이가 6%에 불과한 반면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24%에 달해 구인난이 심각함

6) OECD, ibid.

· 2010년 중소기업은 구인인원을 14.8% 증가했으나 채용률은 12.3%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대기업의 경우 채용률이 54.4%나 증가[7]

<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임금은 현금급여와 상여금의 합산임.

< 2010년 기업규모별 부족 인원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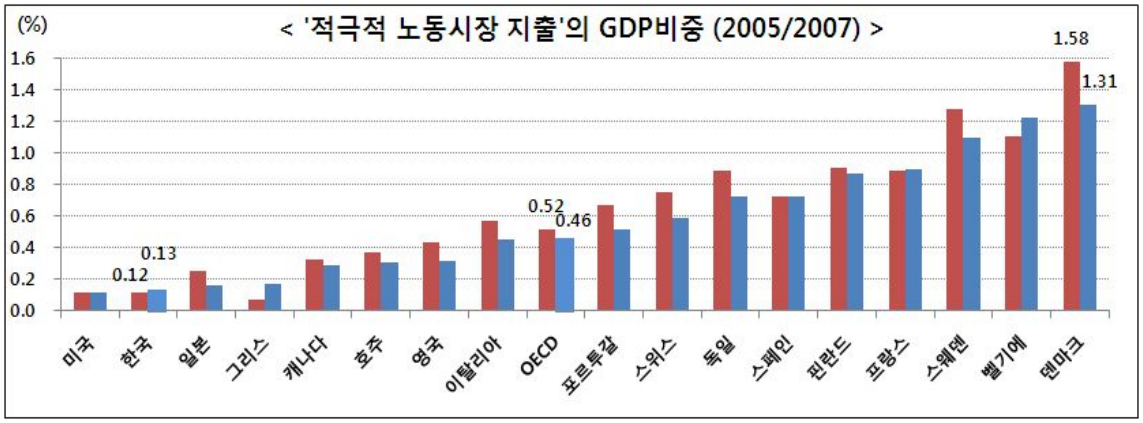
구분	구인 (A)	채용(B)		부족인원 (A-B)
		상용	기타	
전체	563,341	335,835	110,562	116,944 (20.8)
300인 미만	450,046	255,381	84,863	109,802 (24.4)
300인 이상	113,295	80,453	25,698	6,730 (6.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0.
주 : ( )는 구인 대비 부족인원 비율

O(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미흡) 우리나라의 직업훈련과 고용정보 제공 등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적극적 노동시장' 관련 지출의 비중이 매우 낮음

- 공공복지지출의 비중을 프로그램별로 나눠 보면, 고용의 안정성과 실업자의 재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된 지출 비중은 2007년 GDP의 0.13%에 불과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련 지출 비중의 OECD 평균은 2007년 0.46%로서 우리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편이며, 덴마크는 1.31%로 우리의 10배 수준



자료 : OECD SOCX Data (http://stats.oecd.org/wbos/default.aspx?datasetcode=SOCX_AGG)
주 :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포함됨

7) 노동부, *2011 고용백서*.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8대 정책 과제

(1) 교육시스템의 구조조정

○ 교육시스템의 구조조정과 마이스터高 활성화, 취업제도의 개선, 청년고용 유인 정책 등을 통해 청년 취업난을 완화시켜야 함

- **교육시스템 구조조정 :** 대학교의 구조조정을 통해 고학력 실업자의 양산을 억제하고 중고생들의 직업의식과 진로교육을 강화
  - 경쟁력이 낮은 대학의 퇴출 및 특성화 대학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취업률이 저조한 4년제 대학은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으로 전환을 지원
  -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직업의식과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입학시험을 간소화하는 대신 대학졸업요건을 강화하여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을 억제

- **마이스터고의 활성화 :** 마이스터고의 다양화하고 졸업 후 국가공무원으로의 안정적인 취업을 보장하는 등 전문기술인력 양성 유인책을 마련
  - 패션의류, 보석세공, 영화·방송제작, 엔터테인먼트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인기직종인 행정전문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의 분야를 다양화
  - 세무고등학교→은행, 철도고등학교→철도청, 항공고등학교→항공사 등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관련기업 취업시 우대 또는 취업을 보장
  - 이외에 기숙사, 체육관 등 마이스터고에 대한 시설투자를 늘리고 및 무상급식과 해외 연수 프로그램 도입 등 학생복지 프로그램을 강화

- **취업제도의 개선 :** 취업이나 국가고시에서 객관적인 업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고졸취업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
  - 대졸 경력 요구를 지양하고, 기업의 인턴제 의무화 및 인턴 경력의 취업시 우대 등을 통해 학력보다 실제 업무능력을 지닌 인력을 충원
  - 대학생들의 무분별한 국가고시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 고시제도의 자격시험으로의 전환과 함께 관련분야의 경력자나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

- **청년 고용 유도 :**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 과감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청년 창업과 해외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

· 규모별로 고용우수기업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법인세 감면, 부채이자율 인하, 보험보증료 할인 등 다양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확대
· 대출이자의 면제 등 청년창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코트라 등을 통해 해외 취업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

○ (선진사례) 영국의 청년 뉴딜 프로그램 (New Deal for Young People)

- 1998년 영국에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던 정부의 구직상담 및 취업 알선 프로그램
  · 만 18~24세 청년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구직급여를 청구할 경우 정부가 강제로 뉴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전문 지도교사들의 '1대1' 밀착 상담과 체계적 훈련을 통해 취업이 될 때까지 책임져 주는 제도임
  · 청년 뉴딜 프로그램의 시행 결과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총 68만 명이 참가했고 전체 수료자 60만 8,000명 중 23만 6,000명이 취업에 성공

- 프로그램 단계별 지원 내용
  ① 입문 단계(Gateway) : 개별 상담원이 각 참가자마다 지정되고 상담원은 직장 알선에 주력
  ② 뉴딜 옵션 단계 (New Deal Options) : 입문단계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 아래 4가지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
    i) 고용 보조금지급 - 뉴딜 참가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1인당 주 60파운드의 보조금 지급
    ii) 교육과 훈련 - 보통 2급 자격증을 수여하는 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에 참여하고, 훈련기간에 구직급여를 제공
    iii)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구직급여 제공
    iv) 환경개선활동 - 지역사회의 환경개선 프로그램에 동참할 경우 구직급여 제공
  ③ 추수 단계 (Follow Through) : 뉴딜 프로그램 참여기간에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거나 새로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 청년 뉴딜과 같은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신속한 고용시장 유입을 지원하며,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함

(2) 청년 직업교육 강화 : 투 트랙(two-track)형 · 현장형 직업교육 강화

○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 탈피, 고등학교 교육에서의 산학협력 강화, 마이스터高 확대 등 투트랙(two track) 진로 설계를 지원해 나가야 함

- 실업계 고교 진학률 제고를 통해 고학력 현상을 완화하고 고학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어야 함

·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마이스터 고교 등 실업계 고등학교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지나친 고학력과 이에 따른 구직·구인 간 미스매칭 현상을 완화

· 고등학교에서도 인문 · 실업계 간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연성을 제고

- 독일의 이중직업교육 체제(Dual System)과 같이 실업계 고교도 기업 연계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실업계 고교와 대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과의 기업 연계를 강화하여 현장 실습 기회를 넓혀 기업 맞춤형, 기술 중심적 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함

· 사회 차원에서도 초등 교육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신설과 실습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직업 스펙트럼을 넓혀야 함

- 청년 취업자를 위한 정부기관의 일자리 중개기능을 확대하고 사회 안전망이 보다 강화된 고용 유형 다변화로 청년 고용시장의 유연성도 높여야 함

· 독일의 고용지원센터(PES; Public employment services)는 2011년 4월 기준 직원 1인당 청년실업자 86명(1:86), 기타 158명(1:158)으로 청년 취업자에게 보다 심층적인 구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미니잡(Minijob), 미디잡(Midijob)[8]등 고용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유연성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을 완화해야 함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중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부문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켜 청년 일자리의 미스매칭을 완화

· 특히 중소기업 세계화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로 연결될 수 있음

8) 미니잡은 월 400유로(약65만원) 이내, 미디잡은 월 400-800유로(약65~130만원) 이내의 저임금 일자리

○ (선진사례) 독일의 현장 중심 직업교육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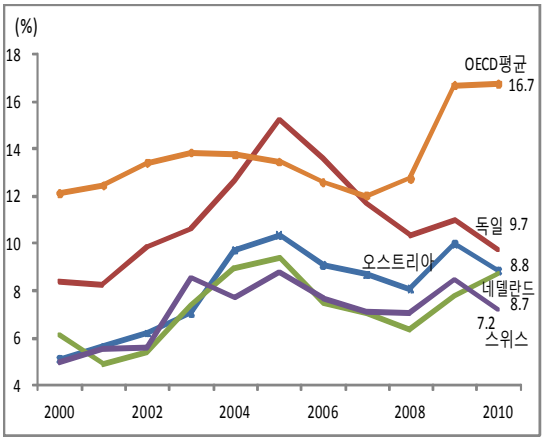
- **독일의 고용시장이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면서 '고용기적'이라 일컬어짐**
  -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2011년 8월 기준 8.9%로 유로존 평균 20.4%, 프랑스 23.5%, 미국의 17.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현장 실습이 강화된 직업교육(Dual System)에 기반한 독일의 중·고등 교육과정**
  - 독일의 청년층(15~29세)은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 한 이후에 고용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청년층 취업자 중 고졸 이하 비중이 59.5%에 달함
  - 청년층(15~29세) 취업자 중 대졸이상(최종학력) 비중은 14.4%로 유로존 평균 23.8%, 프랑스 36.6%에 비해 크게 낮으나, 30세 이상의 경우 30.9%가 대학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전문가 과정(직무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

- **독일 특유의 독특한 도제시스템(Apprenticeship System)과 기업과 연계된 직업교육체제가 구인구직 간 미스매칭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
  - 2008년 기준 약 48.5만 기업이 직업훈련과정을 제공하는데 이 중 99.1%는 500인 이하 중소기업[9]이며, 이에 따라 직업교육생의 82.3%(2009년)가 중소기업에서 현장교육을 받고 있고 해당기업에의 취업률 또한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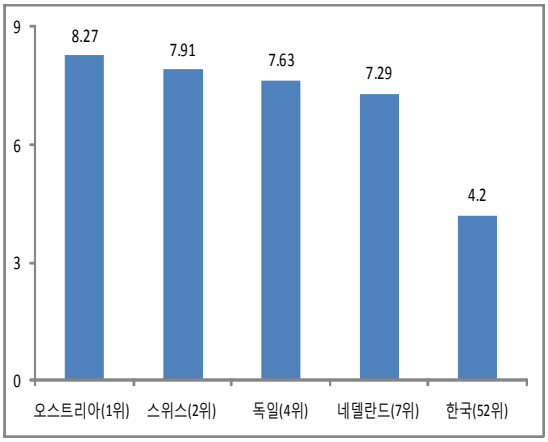
-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실업계 고교로의 진학률이 높고 학교와 현장교육이 결합된 직업교육체계가 발달된 나라들이며, 청년실업률은 낮고 중소기업의 효율성은 세계 상위를 기록하고 있음**

<OECD 중 청년실업률이 낮은 국가>



자료: OECD 통계
주: 15~24세 기준임.

<중소기업의 효율성 지수>



자료: IMD, '국가경쟁력 연감 2011'
주: 설문조사 결과임.

9) 독일 중소기업청, 독일은 고용인원 500인 이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구분됨.

(3) 청년 글로벌 리더 양성

○ 글로벌 리더 및 지역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해외인턴사업 등 정부 주도 프로그램을 활성화[10)]

- 정부는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 및 청년층의 고용 촉진 등 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청년 세계화 사업을 추진
  - '글로벌청년리더 10만명 양성(2008년)'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면서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진행
  - 또한 산업인력관리공단(해외취업), 국제협력단(KOICA, 봉사활동) 등 유관기관을 통해 다양한 청년 세계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인턴사업 규모는 2011년 2,500여명 수준(예산 215억원)
  - 이밖에 노동부,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등 중앙부터와 각 지자체에서 해외취업연수, 해외건설인력양성,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업 등의 사업을 진행

< 정부 추진 해외인턴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명)

구분	주무부처	2010년		2011년	
		예산	인원	예산	인원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	교육과학기술부	12	329	13	300
한·미대학생 연수취업		47	377	50	340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50	653	50	500
교사대졸업자 해외진출		-	-	5	24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	지식경제부	49	1,007	40	850
국제전문여성인턴	여성가족부	3	24	4	30
관광분야 해외인턴	문화관광체육부	7	100	7	100
중소기업 해외인턴	중소기업청	-	-	21	200
농업/외식 해외인턴	농림수산식품부	2	28	18	230
공통운영비	국립국제교육원	-	-	7	-
합계		170	2,518	215	2,574

자료: 2011년 정부 해외인턴사업 추진계획(안), 교육과학기술부.

10) 청년 세계화에서 논의하는 범위는 장단기 취업, 인턴(연수), 봉사 활동 등이 포함된 민·관의 포괄적 개념이나 본 고에서는 통계 수집이 가능한 정부 주도 프램그램 위주로 설명

○ 정부지원 해외인턴 프로그램의 체계적 통합관리와 함께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사후평가시스템 등이 필요

-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로 체계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
  · 기존의 유사 사업에 대한 통합 및 정리,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법률에 근거한 통합 운영기구 및 관리체계 개발
  * 미국의 경우 법률에 의거 4개의 공식 기관을 운영(<선진사례> 참조)

- 파견 인력의 실수요자인 현지 기업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인재 공급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중요한 문제
  · 파견 인력의 직무 수준이나 외국어 능력 등이 해외 현지 기업이나 진출한 국내 기업의 수요에 못 미칠 경우 한국의 인재 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
  · 따라서 인력 선발 단계부터 수요 기업이 참여한 파견 인력의 선별과 현지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국내의 사전 교육 강화 등 보완책이 필요

- 사회 사각지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봉사활동, 어학연수 확대 등 글로벌 감각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현실화가 필요
  · 청년 세계화 사업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청년층들 역시 해외파견을 통한 어학 능력 향상, 해외 경험 축적이 목표인 경우가 상당수
  · 결국 고졸자,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청년들의 해외봉사활동 파견 확대, 해외 어학연수 지원 등이 청년의 글로벌 감각 습득을 위해 오히려 현실적

- 국제기구 파견 등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에도 적극 노력
  · 경제력 증대, 국제 사회에서의 발언권 강화 등 한국의 국제 위상이 높아질수록 글로벌 고급 인력의 수요는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
  · 따라서 국제기구 등에서의 경험을 축적한 고급 인력들은 향후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있어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청년 세계화는 장기간에 걸쳐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으로서 장기적 관점의 사업 계획 및 평가 시스템 수립이 요구

○ **(선진사례) 미국은 공공, 민간(기업, 비영리, 종교단체) 등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청년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 산학 연계, 법률에 의거한 정부 주도, 민간 단체 등 다양한 계층에서 시행
  · 단기 : 산학 연계, 비영리 조직 대행 서비스를 통한 해외 인턴십(단기 취업)
  · 공공 : 법률에 의거한 공식 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 해외 인턴 및 취업 알선 (5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약 230개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근무)
  · 기타 : 특화 부문(농업, 교사 등),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 특히 평화봉사단(Peace Corps)은 우리나라에도 1966년부터 1981년까지 약 1,700여 명이 파견되어 교육, 보건, 농업 분야에서 활동. 前주한 미국대사 스티븐슨 역시 33년 전 충남예산에서 영어교사로 활동한 평화봉사단 출신

< 미국의 주요 기관별 청년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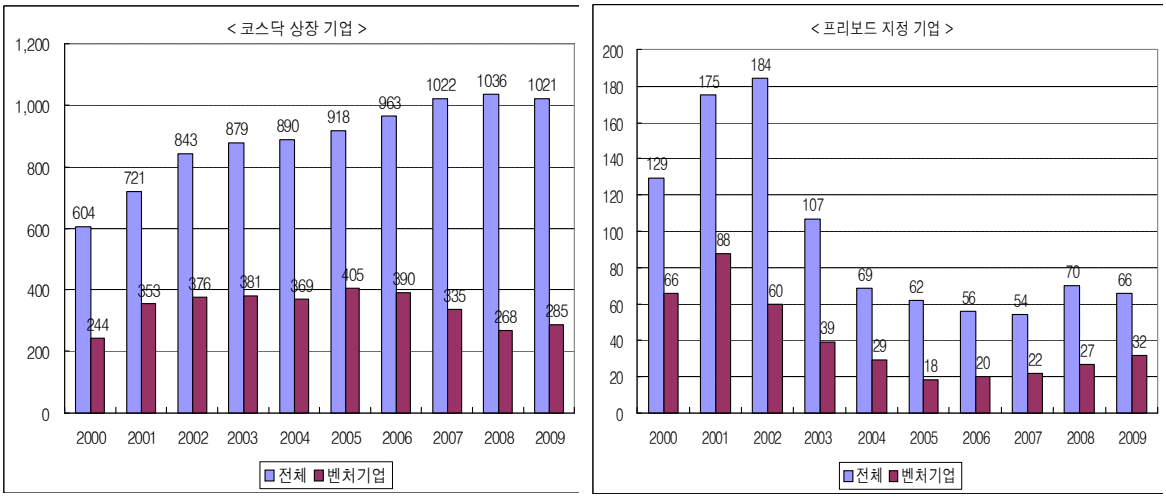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단기 inter-national work	Study abroad internship	- 산학 연계 (임금 미지급, 학점 부여) - 현지 고용주와 지속적으로 밀접한 관계 유지
	Internship placement organization	- 다양한 비영리 조직의 대행 서비스 - 특정한 직업군에 특화(공학, 경영, 예술 등)
	Student work-visa program	- 임시 취업 비자 지원
정부 주도	U.S Government foreign affairs positions	- 1980년 제정된 Foreign Service 법률 근거 · 공식 기관 : FAS, USAID, USDS, USFCS - 해외 인턴십과 취업 알선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국제 경제, 무역 등 해외시장 취업 알선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 해외 주재 정보국 직원 채용(인턴)
농업 관련 (Agricultural exchange programs)		- 관련 협회의 해외 농업 교환 프로그램 - 가축, 낙농, 원예, 양조 등
가정 교사 (Au pair placement programs)		- 직업소개소 : 어린이 돌보기, 가사 수행 - 유럽, 남아메리카 등 (언어 습득)
봉사 활동 (International volunteer opportunities)		- Peace Corps : 세계평화와 국제 친선 목적 · 138개국에 총인원 178,000여명 파견 실적 - Volunteer vacations : 관광 자원봉사 프로그램 - Work camp : 자원 봉사자, 종교 단체

(4) 청년 벤처기업 10만개 육성

○ 청년 중 상당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못찾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음

- 벤처기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 및 프리보드 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은 모두 합해도 전체의 1.7%(2009년 기준)에 불과함
  · 코스닥 시장에서 벤처기업의 비중은 2001년에 50.3%를 차지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면서 2009년 말에는 27.9%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음

< 코스닥 및 프리보드 시장의 벤처기업 추이 >



자료 :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통계 자료 재구성

○ 벤처기업이 실패하더라도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창업 의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 **민간의 벤처투자 활성화:** 민간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벤처투자를 촉진해야함
  · 유망한 벤처사업에 투자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엔젤 투자제도를 위주로 세제 혜택을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창업 아이디어 인증제'의 도입을 검토

- **청년 벤처자금 확대: 벤처의 성공은 엔젤투자자의 확보, 벤처캐피탈 자금의 유치 여부에 달려 있는바 청년 벤처자금의 확대가 필요함**
  · 청년 벤처펀드가 부족하여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이 조기에 소진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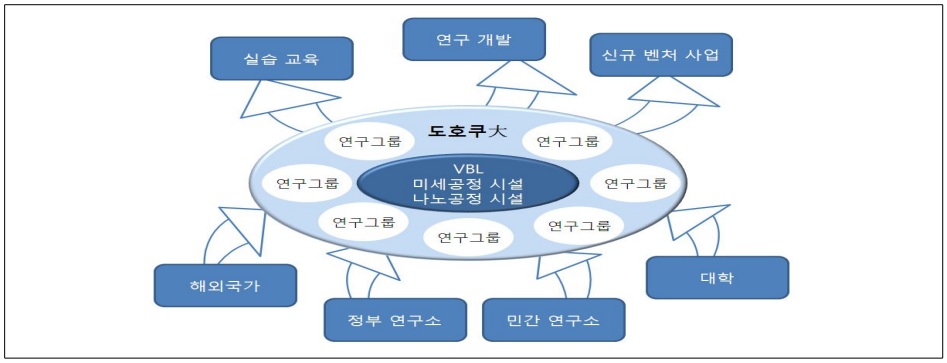
- **M&A 거래소 설립:** M&A 거래소를 설립하여 장래가 유망한 벤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벤처사업가의 신규 벤처 설립을 촉진해야함
  · 일반적으로 창업 5~7년 벤처 기업은 초기기업 혜택이 사라져 경영난에 빠지기 쉬운데 이러한 벤처 기업의 대기업 인수를 활성화하여 대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 및 벤처사업가의 신규 벤처 설립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벤처 멘토제의 도입: 선배 벤처기업인이 도제 방식으로 후배 예비창업자를 키우는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
  · 벤처 창업가들에게 경영·홍보·특허 노하우를 공유하고 조언하는 벤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초기 벤처기업의 창업교육 시스템을 강화함

○ **(선진사례) 창업률 낮은 일본, 대기업 위주 스웨덴의 벤처지원 정책**

- **일본의 도호쿠대는 교내에 VBL(Venture Business Laboratory: 벤처연구실) 시설을 마련하여 자본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수시로 각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을 열어 경영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
  · 일본정부도 대학발(發) 벤처 1000개 육성 계획 발표, 투자자 소득공제 제도 실시[11], 최저자본금제도 폐지[12] 등을 통해 벤처 육성을 지원함

< 일본 도호쿠大 벤처 지원 시스템 >



- **스웨덴 스톡홀름 기업가정신대학(SSES)은 스톡홀름경제대, 스웨덴왕립기술대, 카롤린스카의대, 콘스트팍예술대, 스톡홀름대 등 유명 대학들의 공동 참여를 통해 기업가 정신에 특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학생들은 각 대학에서 일반 강의처럼 SSES 코스를 신청해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부터 프레젠테이션 기술, 협상 전략, 마케팅 기법 등 기업 경영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음

11) 회사 설립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액을 총소득에서 공제
12) 창업에 필요한 최저 자본금을 기존 1000만 엔에서 단돈 1엔으로 낮춰 사실상 폐지

(5) 청년층이 선호하는 미래산업 육성

○ 국내 고용유발효과가 큰 '고기술·신지식 산업 육성'을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

- 신재생에너지·바이오·로봇 등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 강화
  - 소프트웨어·콘텐츠, 유통, 관광, 문화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 미래산업을 뒷받침할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발굴·양성·유입·안착을 위해 생애주기적 지원방안 마련

- 우수한 인재를 고급 과학기술 인력으로 양성하고 세계적 연구자들이 국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급 두뇌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최우선순위를 인적자원에 두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

○ (선진사례) 핀란드의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실업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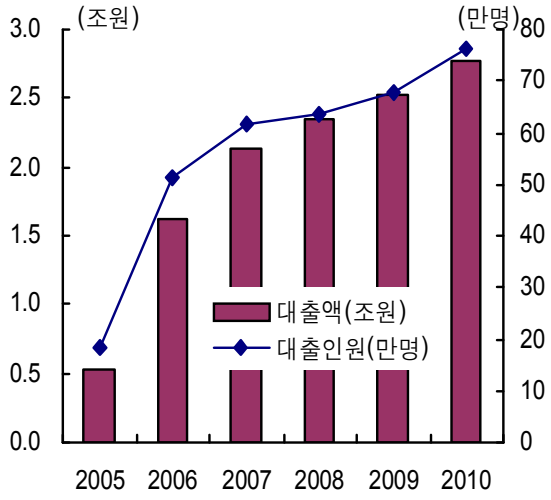
- 핀란드의 실업률은 1990년대 초반 20%에 육박하였으나 1995년 정부와 기업, 대학의 협력으로 위기 극복
  - (학제간(interdisciplinary) 협력 강화) 인문·사회과학, 공학·자연과학, 예술·디자인 등 다양한 학문을 연계한 융합 커리큘럼 개발 및 연구 지원
  - (대학과 기업의 협력체제) 기업이 원하는 연구를 대학에서 수행하는 산학 시스템을 강화하여 대학과 기업 상호간 시너지 효과 창출
  - (순수과학과 응용기술의 조화) 순수 학문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담당하고 기업이 보조하는 시스템 구축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 특화된 대기업과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은 주종관계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체제 구축

(6) 청년 신용회복[13]을 통해 청년 취업의 걸림돌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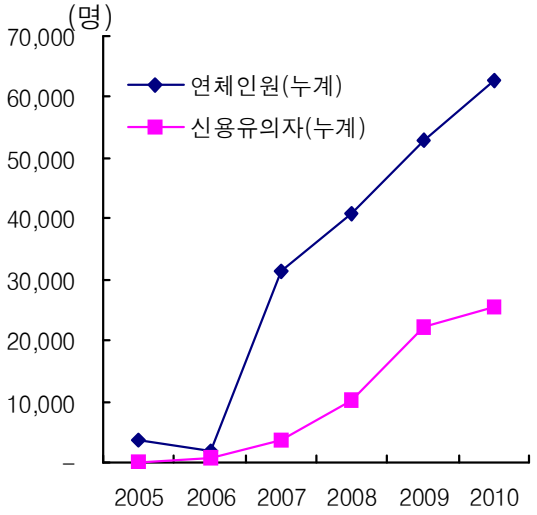
○ 학자금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학자금대출의 상환이 어려운 청년층(대학생) 신용불량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청년 취업의 걸림돌로 작용

- 학자금 대출 증가[14]에 따른 연체자 및 '신용유의자'가 급증하고 있음[15]
  - 2005년 학자금대출 연체인원은 약 4천명이었지만, 2010년에는 6만명을 상회하면서 5년 만에 15배 이상 증가
  - 이들 연체자 중 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신용유의자'의 수도 2005년 0명에서 2010년 2.5만 명을 상회

< 학자금대출 >



< 학자금대출 연체자 >



자료 : 박주선 의원실 보도 자료

○ 단기적으로는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는 신용회복 대책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신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 과제) 외국과는 독특하게 신용불량의 심화 정도에 따라 마련된 제도적인 신용회복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13) 청년들이 취업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취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청년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마련을 '청년 고용환경 개선' 방안의 하나로 제시함

14) 학자금대출 학생수가 2005년 18만 이상에서 2010년에는 76만명을 상회, 대출금액(누계)도 2005년 약 0.5조원에서 2010년에는 약 2.8조원으로 급증

15) 카드사태 직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국내 신용불량자 수는 2004년 6월말에 경제활동인구의 약 1/6인 400만 명에 육박한 이후 감소하다가 2005년부터 '신용불량자'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 더 이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 대신 '금융연체자' 또는 '신용유의자'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

·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10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자산관리회사에서 다중채무를 관리함과 동시에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약식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운영
· (개인워크아웃제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빚을 갚을 여력이 있거나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데 목적
· (개인회생제도)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이 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동안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어 개인파산으로 직장마저 잃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16]

- (장기적 과제) 신용위험 노출이 점점 확대되는 현실에서 청년층 신용불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교육을 강화할 필요
·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휴대폰 사용의 보편화와 모바일 결제, 인터넷 거래 증가, 첨단 통신기술과 신용카드의 융합 등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청소년 등 젊은 층에게 신용사회의 환경과 기회를 주는 한편 그만큼 신용의 위험에도 노출
· 청년층이 본격 사회진출에 앞서 건전한 경제적 가치관 확립과 인생계획의 설계와 이에 맞추어진 금융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교육이 절실

○ (선진 사례) 미국, 일본, 프랑스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 일괄적 기준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분류해서 관리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개인파산 신청하거나, 신용카운슬링협회 등 민간단체를 통하여 신용을 회복
· (미국) 단독 기관이 정보를 집중하지 않고, 개인 신용평가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모아 활용
· (일본) 은행·신용카드·대금업 등 해당 업종 협회별로 신용 정보를 집중
· (프랑스) 중앙은행에서 집중해서 신용 정보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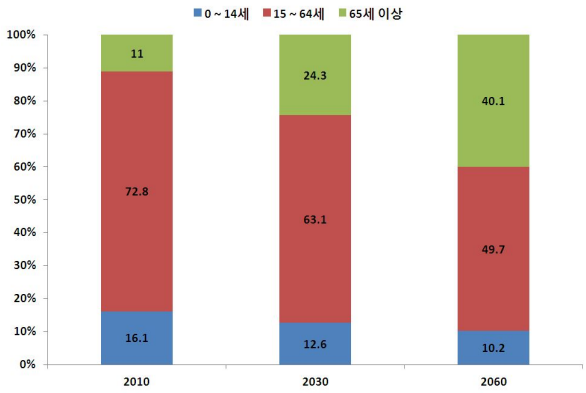
16) 정부의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을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채무이행을 정지시켜 주는 법적 제도. 파산선고에 이어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파산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커다란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지위가 회복된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남용가능성과 신용거래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우려

(7) 청년 취업 인프라(주택, 보육, 근무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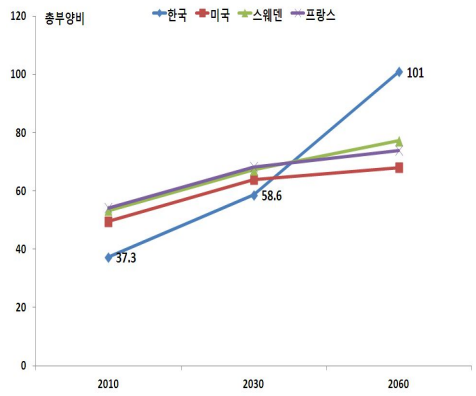
○ 주택, 자녀 보육, 근무환경 등 청년들의 취업 인프라가 열악하여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의 고착화, 고령화 심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청년들을 위한 주택, 보육, 근무환경 등 취업 인프라가 열악하여,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기준 60대 이상 인구가 11%에서 2060년에는 40%를 넘어서고 총부양비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총부양비[17]가 2010년에는 미국, 스웨덴, 프랑스 보다 낮았으나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2060년에는 이들 국가보다 높아져 101을 기록할 전망
  - 생산가능인구(15-64세) 1% 감소時 1인당 실질GDP 0.08%p 감소, 노인인구 1% 증가時 1인당 실질GDP 0.04%p 감소[18]

< 인구 구조의 변화 >



< 국가별 총부양비 추이 >



자료 : 통계청(2011),「장래인구추계: 2060-2060」

○ 20-30대의 미혼율 증가, 만혼 현상, 저출산 추이 등을 바꿔놓기 위해, 신혼부부용 도시형 생활 주택 공급 확대, 영유아 양육 시설 증설, 보육의 공공성 확대, 일-가정 양립정책 등이 필요함

- **(신혼부부용 도시형 생활 주택 공급)** 20-30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액 보

17) 총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으로 유소년부양비=(0~14세인구)/(15~64세인구)*100으로 산출하고 노년부양비=(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100로 산출함
18) IMF(2004), World Economic Outlook

증금과 월세(rent)만으로 입주 가능한 도심형 렌트 아파트 및 도심형 생활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미혼 남녀에게 결혼 문턱을 낮춰줌

- 20-30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하철 역세권 주변을 중심으로 '렌트아파트'를 공급
-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완화

- (보육의 공공성 확대)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과 양육시설 양적 확대에 주력해 왔으나, 이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확대
  - 보육관련 수당을 자녀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으나, 자녀수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을 과감히 철폐하여 양육비용 지원의 수혜자격을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대

- (일-가정 양립정책) 임신 여성근로자에게 유연근로 선택권을 부여하고, 휴가적치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통해 일-가정의 양립정책 확대
  - 여성근로자에게 유연 근로 선택권을 부여해서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동반 상승을 유도함

○ (선진사례) 프랑스의 휴가적치제도, 네덜란드의 근로시간 단축권

- **(휴가적치제도(time-banking system))** 평소에 초과근무를 통해 휴가를 최대 5년까지 적치(time-banking)하도록 허용하고, 적치된 휴가를 출산 및 육아 휴가에 연계하여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
  - 프랑스는 1998년 제1차 오브리(Aubry)법에 의거, 연간 탄력근로시간제 및 여러 해에 걸친 휴가적치제도(time-banking system) 등 근로형태 및 시간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출산율 제고를 도모함
  - 네덜란드의 근로시간 단축권 부여(2000년), 독일의 6개월 이상 고용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권 부여(2001)[19]등 성공 사례

- **(주택바우처 제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등 OECD 국가 대부분이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임대료 일부를 쿠폰 등의 형태로 보조해 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

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8)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성화

○ 직업훈련과 일자리 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지출을 늘리는 등 정부 정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성화**: 직업훈련의 내실화, 구인-구직 정보시스템 선진화, 산전후 휴가 활성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업그레이드하여 실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혁신함
  - 호주의 경우 최근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센터링크' 조직을 출범시켜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했으며, 많은 민간업체들을 복지서비스 전달 에이전트로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함

- **고용창출형 복지 지출의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지출의 비중을 2007년 0.13% 수준에서 단기적으로 0.5% 수준까지 끌어 올리며, 장기적으로는 덴마크 등 북유럽 선진국과 비슷한 GDP 1% 수준까지 높여 가야 함
  -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등 실업자의 재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바꿔야 함
  - 구인구직 정보제공 시스템을 혁신하여 정부 기관과 민간 서비스업자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방식을 검토함. 선진국의 경우 구인구직 정보제공 시스템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선진사례) 덴마크의 경우, 세계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지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경영사정에 따라 해고가 자유롭지만 정부가 실업수당과 직업훈련으로 뒷받침하는 유연안정성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

- 국민 행복도 순위가 매우 높은[20] 덴마크는 2007년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GDP의 1.3%로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 IMD의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는 '종업원의 훈련'과 '근로자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함

20) 2010년 7월21일 갤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2009년 사이 전세계 155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덴마크가 가장 행복한 나라로 조사됐으며 한국은 56위에 불과.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인생 평가'와 조사 전 하루 동안의 행복도를 묻는 '일상 경험'의 두 가지를 항목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각국의 행복 정도를 수치화했으며, 155개국 중 덴마크가 1위,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룬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

- 기업 입장에서는 잘 훈련된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경영사정이 안 좋아져 해고하더라도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구조조정이 손쉬운 편
-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되더라도 실업수당으로 생활이 충분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바로 재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 덴마크는 지니계수가 세계에서 가장 낮아 빈부격차가 최소화된 나라로 유명하며, 이와 같은 분배구조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행복감을 높여주고 있음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수석연구위원(2072-6213, dykim@hri.co.kr) 외

<별첨> 청년 실업자 및 '일하고 싶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실업자		411,741	386,571	364,174	327,582	314,529	347,306	339,743	320,221
취업 의사와 능력을 지닌 비경제 활동 인구	취업 준비생	19,082	15,873	21,369	24,671	34,598	37,652	46,285	44,501
	쉬었음	21,410	25,535	22,597	21,660	23,778	34,556	41,329	37,757
	기타	30,201	23,741	20,369	19,608	17,322	23,940	32,539	30,025
	소 계	70,693	65,149	64,335	65,939	75,698	96,148	120,153	112,283
합 계		482,434	451,720	428,509	393,521	390,227	443,454	459,896	432,504

자료: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1. '기타'는 일할 의사와 능력을 지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를 하지 않은 학생, 심신장애, 육아·가사 등에 체크한 청년들. 2. 청년(15세~29세) 기준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1.8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2	-0.3	-0.5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1.7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2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1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3월 16일	3월 22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2.30	2.28	-0.02%p
	엔/달러	81.19	80.66	77.66	83.59	83.47	-0.12￥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3080	1.3211	0.0131$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3,233	13,046	-187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10,130	10,127	-3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3.59	3.63	0.04%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25.9	1,129.4	3.5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2,034.4	2,026.1	-8.3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3월 16일	3월 22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107.12	105.21	-1.91$
	Dubai	88.80	106.75	104.89	122.23	121.99	-0.24$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317.93	312.27	-5.66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E
					1/4	2/4	3/4	4/4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0.3	6.2	4.2	3.4	3.5	3.4	3.6	4.0
	민간소비 (%)		0.0	4.1	2.8	3.0	2.0	1.2	2.2	2.5
	건설투자 (%)		3.4	-1.4	-11.9	-6.8	-4.6	-4.0	-6.5	2.3
	설비투자 (%)		-9.8	25.0	11.7	7.5	1.0	-3.4	3.8	5.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328	294	26	55	69	127	277	170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404	412	71	84	63	104	321	290
		수출 (억 $) 증감률 (%)	3,635 (-13.9)	4,664 (28.3)	1,310 (29.6)	1,427 (18.7)	1,412 (21.4)	1,416 (10.0)	5,565 (19.3)	6,344 (14.0)
		수입 (억 $) 증감률 (%)	3,231 (-25.8)	4,252 (31.6)	1,239 (26.2)	1,343 (27.1)	1,349 (27.6)	1,313 (13.4)	5,244 (23.3)	6,054 (15.5)
소비자물가 상승률 (%)			2.8	3.0	3.8	4.0	4.3	4.0	4.0	3.5
실업률 (%)			3.6	3.7	4.2	3.4	3.1	2.9	3.4	3.6
국고채수익률 (3년, 평균, %)			4.0	3.7	3.8	3.7	3.6	3.4	3.6	4.0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276	1,156	1,120	1,083	1,085	1,144	1,108	1,05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